

연금 받을 권리는 누리고 신분변동사항은 알리고



공무원연금은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달 25일 연금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오는 7월 25일은 토요일이므로 그 전날인 7월 24일에 입금됩니다.

연금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월 185만 원까지 보호

연금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 대상이 됐을 때는 연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된다면 입금된 연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려면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이하 ‘평생안심통장’)

을 이용하면 됩니다. 평생안심통장은 매달 입금되는 연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른 압류금지 생계비 범위 내에서 압류를 예방하는 통장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생계비는 월 185만 원이며,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하려면 연금수급자가 본인 신분증을 갖고 아래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평생안심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단위농협, 우체국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한 다음에는 연금 받을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연금수급자 수급계좌 변경신고서’와 ‘평생안심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매달 20일 이전까지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노후가 든든 퇴직유족연금

세월이 흘러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중에서도 배우자가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망한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혼인관계에 있었고 사망할 때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혼인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잠시 단절되었더라도 두 사람이 ‘공무원 재직 중에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것과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전에 재혼해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퇴직 후 연금 수급 중 혼인한 배우자라도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했다면 유족으로 인정받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족 해당 여부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연금 승계는 별개

퇴직유족연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퇴직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상속을 포기하여도 퇴직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등으로 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통장이 압류될 위험이 있다면 앞에서 설명한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십시오. 퇴직유족연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른 압류금지 생계비’ 범위 내에서 압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현행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 생계비로 정하고 있는 월 185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 자녀의 생활도 보장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되려면 사망한 퇴직연금수급자가 공무원 퇴직 전에 출생(퇴직 당시 태아 포함)하거나 입양한 자녀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이라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1~7급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 장애진단서’를 기초로 1~14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어진 장애인복지법과는 장애(또는 장애)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에 장애가 호전되거나 완치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퇴직유족연금을 신청할 때 장애 진단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공무원재해보상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만약 장애가 있는 자녀가 퇴직유족연금 승계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자녀 전산등록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공단이 퇴직유족연금 승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지금 바로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십시오.

공단에 알려야 할 의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모로 법적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 바로 연금수급자 본인과 유족의 신분변동사항 신고의무입니다.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변동사항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연금수급자의 사망이나 배우자 자격으로 유족연금을 받다 재혼(사실혼 포함)한 사실은 공단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53조에 따른 연금수급자와 유족의 의무입니다.

공단도 연금을 잘못 지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아 연금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공단과 연락될 수 있도록 연금수급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공단에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배우자나 자녀의 연락처를 공단에 등록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 악화나 청력 저하 등으로 공단과 직접 소통이 어려울 때를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유족연금을 승계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라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1~7급의 장애가 있는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유족연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호 정답

1.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반드시 공무원연금을 청산해야 합니다.(X)
2. 공무원연금은 이민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O)

응모 마감일은 7월 17일입니다. 응모 방법은 74쪽에서 안내합니다. 당첨된 독자님께는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 원을 선물로 드립니다.